

가임여성의 출산 · 양육에 대한 인식

공태현¹, 임정도²✉

¹동부산대학 보건의료행정과, ²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Recognition on the Birth · Bringing-up of Fertile-Women

Tae-Hyun Kong¹, Jung-Do Lim²✉

¹*Dept. of Health & Medical Administration, Dong-Pusan College University,*

²*Department of Healthcare Management,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Abstract>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ed factors for birth · bringing-up from 544 women from 20s to 40s who can be pregnant residing in Busan in order to explore the method for birth encouragement in the midst of the low birth reality in Korea.

It was revealed from the research result that the married women who have a birth plan recognize the marriage and the value of the children more importantly than the economical burden. In addition, it was known that the wished number of the children for unmarried women was influenced most greatly by the marriage and the value of the children. The expectation of the institutional supporting for the birth encouragement was the consideration for the time of bringing up and support to returning to the labor market after the birth.

Key Words : Birth · Bringing-up, Marriage and the Value of the Children, Returning to the Labor Market after the Birth.

I. 서론

한 국가의 인구규모나 구조는 사회·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출산율은 인구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출산율 감소는 단순한 인구밀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국가적 존립과 직결되는 생산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출산율 증가를 위한 사회·국가적 노력은 국가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1].

이러한 출산율은 개인의 가치관을 비롯한 인구, 경제, 사회, 문화적요소 등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가치관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심리적인 요인으로서[2], 개인행동의 방향을 결정해 주고 나아가 만족감이나 행복과 불행의 판단에까지 관계되기 때문에 개인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동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3].

한 나라의 출산율 수준을 파악하고 국가 간 출산율을 비교하는 데는 합계출산율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이란 가임여성 한명이 가임기간 동안 평균 몇 명의 아이를 낳을 것인가를 나타낸 지표로 국가별 출산율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OECD에서는 이 지표가 2.1 이하일 때를 저출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통계청에 의하면 1970년 4.71명이었으나, 1990년 1.60명, 2010년에는 1.22명으로 현저히 감소하였고 있으며, 2010년을 기준으로 OECD 주요국가들의 출산율은 일본 1.27명, 미국 2.09명, 프랑스 1.89명, 독일 1.32명, 이탈리아 1.38명, 영국 1.84명, 세계평균 2.56명으로[4],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출산율이 낮은 상황이며 OECD의 저출산 기준에 따라 저출산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출산·양육 및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들

에서 주로 제시하고 있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사회·경제적 요인, 가치관적 요인, 정책적 요인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강은주[5]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과 취업하는 기혼여성들의 증가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이러한 문제해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삼식[2]은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한국에서의 저출산 원인은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성 분업적 역할이 지속되고, 육아인프라가 미흡하여 일-가정의 양립이 곤란하고,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호영[1]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아직 그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우며 현재 매우 낮은 출산율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예측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대응정책은 장기적인 대응정책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출산장려정책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하였고, 최윤정[6]은 미혼 여성들은 과거세대와 달리 가족형성에 자신의 인생계획을 전적으로 종속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인생계획에 따라서 가족형성 여부나 시기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 저출산에 정책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하였다.

스웨덴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정부가 가족정책의 범주 내에서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부모보험제도, 아동수당제도 및 공적 보육제도 등을 시행한 결과 1990년대 이후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7][8][9]. 반면 독일은 아동수당, 자녀세금공제, 주부연금제 등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7][8][10].

그러므로 한 나라의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출산율이 낮은 이유와 이에 대응하여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즉, 출산과 양육이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출산·양육과 관련된 문제의 인식은 변화하는 시대적·사회적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실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출산·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가임여성의 연령대 및 결혼유무에 따라 출산·양육과 관련된 개인가치관, 저출산 요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둘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양육 관련 요인들의 인식정도를 향후 출산계획의 유무와 맞벌이 유무에 따라 알아본다.

셋째,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양육 관련 요인의 인식정도를 결혼 후 출산 희망자녀수에 따라 파악하고, 미혼여성들이 결혼 후 출산 희망자녀수에 출산·양육 관련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넷째,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대한 희망사항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의 수집

출산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료수집 방법은 문헌연구가 58.9%, 설문지법이 33.5%로 문헌연구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1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실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출산·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인식과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대한 희망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을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가임여성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1년 2월부터 3월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으로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응답 설문 중 응답누락 등을 제외한 544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측정도구 및 요인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출산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가치관·사회·경제적 요인, 가치관적 요인, 정책적 요인을 사용하였으며, 출산 관련 연구 중 문헌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헌분석의 자료분석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11],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경우에는 응답문항을 제시하는 폐쇄형과 의견을 묻는 개방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출산·양육과 관련되어 공통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자료 타당성 검증은 위하여 출산·양육 관련 측정항목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출산·양육 관련 측정항목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구분	측정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변수의 조작적 정의	cronbach's α
출산·양육에 대한 개인 가치관	결혼은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027	.706	.035	.042	결혼과 자녀의 의미	.836
	결혼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	.019	.795	.035	.104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은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다.	-.004	.891	.036	-.019		
	자녀가 주는 기쁨과 보람은 상당히 크다.	.052	.843	-.005	.035		
	자녀양육은 부모의 몫이다.	.031	.624	-.013	.282		
	아내는 가정을 돌보고 남편은 바깥일을 하는것이 좋다.	-.063	.187	.029	.868	부부의 역할구분	.767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038	.095	-.013	.891		
저출산의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자녀 교육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커서 자녀 여럿을 키우는 것이 부담 된다.	.792	.018	-.011	-.023	양육비 부담	.859
	사교육비용이 높아 자녀양육에 어렵다.	.871	.028	.049	.027		
	집값을 포함하여 생활비용이 높아 자녀 양육에 어렵다.	.831	-.040	.121	.004		
	애들이 성장할수록 사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다고 생각한다.	.785	.033	.124	-.003		
	육아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712	.081	.032	-.119		
	환경호르몬 등 주위환경의 오염이 여성의 저출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122	-.040	.756	.027		
	만혼, 스트레스 등으로 불임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불임이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046	-.022	.842	-.019		
과거에 비해 개인적, 사회적 요인에 의한 불임률이 높아진 것이 저출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059	.128	.724	.003			
고유값 (eigen values)		3.477	3.180	1.721	1.455	KMO : .775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chi^2=3126.959$ p=.000	
누적분산 (cumulative, %)		21.551	42.206	54.497	65.552		

주) 양정임(2009), 서비스경영학회지 Vol.10, No.2, p.239 에서 재인용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요인회전은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의 선택은 요인적재량 절대값이 0.6이상으로 설정하여, 어느 한 요인에 적재되지 못하거나, 교차적재가 의심되는 측정항목을 제외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결과에 의한 각 요인별 측정항목의 내적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검증 결과 신뢰도계수가 0.6 이하인 항목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출산·양육에 대한 개인 가치관 2개 요인, 저출산의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2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요인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출산·양육에 대한 개인 가치관은 0.783(결혼과 자녀의 의미 0.836, 부부의 역할 구분 0.767), 저출산의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은 0.767(양육비 부담 0.859, 환경에 의한 불임의 증가 0.678)이었다.

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19.0을 이용하여, 출산·양육 관련 요인들에 대하여 연령별·결혼유무에 따라·기혼여성들의 출산계획 유무와 맞벌이 유무에 따라·미혼여성들의 결혼 후 출산 희망자녀수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출산장려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하여 미혼여성들이 결혼 후 출산 희망자녀수에 출산·양육 관련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대상인 가임여성들이 인식 또는 희망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의 제도적 지원 희망사항을 살펴보았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기혼여성

은 226명(41.5%), 미혼여성은 318명(58.5%)으로 연령대별 분포는 20-24세 128명(23.5%), 25-29세 134명(24.6%), 30-34세 102명(18.8%), 35-39세 66명(12.1%), 40세 이상 114명(21.0%)이었다. 응답자의 학력은 전문대졸업 이하 244명(41.2%)·대학교 재학 이상 320명(58.8%)이었고, 종교는 기독교 74명(13.6%)·천주교 69명(12.7%)·불교 171명(31.4%)·기타종교 8명(1.5%)·무교 222명(40.8%)이었다.

연구대상 중 기혼여성의 구성은 연령에서는 40세 이상이 48.2%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전문대졸업 이하 59.7%·대학교 재학 이상 40.3%, 종교는 있는 경우 71.2%·없는 경우(무교) 28.8%,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는 75.7%·있는 경우 24.3%이었고, 맞벌이를 하는 경우 55.8%·그렇지 않은 경우 44.2%이었다.

<표 2> 연구대상의 구성

구분		기혼여성	미혼여성	계
연령	20세-25세 미만	1(0.4)	127(39.9)	128(23.5)
	25세-30세 미만	20(8.8)	114(35.8)	134(35.8)
	30세-35세 미만	41(18.1)	61(19.2)	102(18.8)
	35세-40세 미만	55(24.3)	11(3.5)	66(12.1)
	40세 이상	109(48.2)	5(1.6)	114(21.0)
학력	전문대졸업 이하	135(59.7)	89(28.0)	224(41.2)
	대학교 재학 이상	91(40.3)	229(72.0)	320(58.8)
종교	기독교	30(13.3)	44(13.8)	74(13.6)
	천주교	22(9.7)	47(14.8)	69(12.7)
	불교	104(46.0)	67(21.1)	171(31.4)
	기타종교	5(2.2)	3(0.9)	8(1.5)
	무교	65(28.8)	157(49.4)	222(40.8)
기혼여성 출산계획	없음	171(75.7)		
	있음	55(24.3)		
기혼여성 맞벌이 유무	그렇다	126(55.8)		
	아니다	100(44.2)		
미혼여성 결혼 후 출산 희망자녀수	0-1명		71(22.3)	
	2명		178(56.0)	
	3명 이상		69(21.7)	
계		226(100.0)	318(100.0)	544(100.0)

<표 3> 출산·양육관련 요인변수에 대한 인식

개인가치관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F(p)	저출산 요인 인식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F(p)
결혼과 자녀의 의미	20-25세 미만	3.97 ^a	0.68	3.000*	양육비 부담	20-25세 미만	4.02	0.62	.256
	25-30세 미만	3.85 ^a	0.64			25-30세 미만	4.02	0.59	
	30-35세 미만	3.92 ^a	0.66			30-35세 미만	4.07	0.65	
	35-40세 미만	4.05 ^a	0.69			35-40세 미만	4.04	0.68	
	40세 이상	4.12 ^a	0.65			40세 이상	4.08	0.75	
	전체	3.98	0.67			전체	4.04	0.65	
부부의 역할 구분	20-25세 미만	2.55 ^a	0.99	4.575**	환경에 의한 불임 증가	20-25세 미만	3.33 ^a	0.72	2.716*
	25-30세 미만	2.72 ^{a,b}	0.88			25-30세 미만	3.30 ^a	0.71	
	30-35세 미만	2.85 ^{a,b}	0.96			30-35세 미만	3.56 ^a	0.69	
	35-40세 미만	2.87 ^{a,b}	0.95			35-40세 미만	3.44 ^a	0.67	
	40세 이상	3.05 ^b	0.95			40세 이상	3.47 ^a	0.67	
	전체	2.79	0.96			전체	3.41	0.70	

주 1) Likert 5점 척도, 측정값이 높을수록 인식이 높음을 의미
 주 2) a, b : 사후검증의 동일집단군에 있는 집단
 주 3) * : p<.05 ** : p<.01 *** : p<.001

미혼여성의 구성은 연령은 20-25세 미만 39.9%·25-30세 미만 35.8%로 30세 미만이 75.7% 이었고, 학력은 전문대졸업 이하 28.0%·대학교 재학 이상 72.0%, 종교는 있는 경우 50.6%·없는 경우(무교) 49.4%, 결혼 후 출산 희망자녀수 0-1명 22.3%·2명 56.0%·3명 이상 21.7% 이었다.

2. 연구대상자들의 출산·양육관련 요인변수의 인식

연구대상자들의 출산·양육관련 요인변수들에 대한 인식은 <표 3>과 같다.

먼저 출산·양육에 대한 개인 가치관은 결혼과 자녀의 의미 3.98점, 부부의 역할 구분 2.79점이었다. 즉,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고, 부부의 역할 구분은 평균이하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부부의 역할 구분은 20-25세 미만 2.55점, 25-30세 미만 2.72점, 30-35세 미만 2.85점, 35-40세 미만 2.87점, 40세 이상 3.05점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부의 역할 구분에 대한 인식이 높

았으며, 사후검증 결과 20-25세 집단과 40세 이상 집단 간에는 20-25세 미만 집단의 인식이 평균 이하로 현저히 낮은 다른 집단군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대상자들의 저출산의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인식은 양육비 부담이 4.04점이었으며, 환경에 의한 불임 증가 3.41점이었다.

이들 출산·양육관련 요인변수들은 연령에 따라 출산·양육에 대한 개인 가치관(결혼과 자녀의 의미, 부부의 역할 구분)과 저출산의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요인 중 환경에 의한 불임 증가 변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출산·양육관련 요인변수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결혼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결혼과 자녀의 의미, 부부의 역할 구분, 양육비 부담, 환경에 의한 불임 증가 요인변수에서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인식도가 높았는데, 출산·양육관련 개인 가치관의 결혼과 자녀의 의미와 부부의 역할 구분, 저출산 요인 인식 중 환경에 의한 불임 증가 인식은 결혼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 결혼유무에 따른 출산·양육관련 요인변수 인식

개인가치관	결혼유무	평균	표준편차	t(p)	저출산 요인 인식	결혼유무	평균	표준편차	t(p)
결혼과 자녀의 의미	기혼여성	4.05	0.67	2.335*	양육비 부담	기혼여성	4.06	0.71	.637
	미혼여성	3.92	0.66			미혼여성	4.03	0.61	
부부의 역할 구분	기혼여성	3.04	0.92	5.165***	환경에 의한 불임 증가	기혼여성	3.49	0.67	2.159*
	미혼여성	2.62	0.95			미혼여성	3.35	0.73	

주 1) Likert 5점 척도, 측정값이 높을수록 인식이 높음을 의미
 주 2) * : p<.05 ** : p<.01 *** : p<.001

3. 기혼여성의 출산·양육관련 요인변수의 인식

1) 향후 출산계획 유무에 따른 출산·양육 관련 요인변수의 인식

기혼여성의 출산·양육관련 요인변수들에 대해 향후 출산 계획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출산·양육관련 개인 가치관 중 결혼과 자녀의 의미는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 4.05점·출산계획이 있는 경우 4.08점이었고, 부부의 역할 구분은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 3.08점·출산계획이 있는 경우 2.90점이었으나 출산계획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저출산 요인 인식 중 양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은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 4.13점·출산계획이 있는 경우 3.84점으로 출산계획 유무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환경에 의한 불임 증가에 대한 인식은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 3.50점·출산계획이 있는 경우 3.49점으로 출산계획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맞벌이 유무에 따른 출산·양육 관련 요인 변수의 인식

기혼여성의 출산·양육관련 요인변수들에 대해 맞벌이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출산·양육관련 개인 가치관 중 결혼과 자녀의 의미는 맞벌이 하는 경우 4.06점·맞벌이 하지 않는 경우 4.05점으로 맞벌이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부부의 역할 구분은 맞벌이 하는 경우 2.91점·맞벌이 하지 않는 경우 3.20점으로 맞벌이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기혼여성의 향후 출산계획 유무에 따른 출산·양육관련 요인변수 인식

개인가치관	출산계획	평균	표준편차	t(p)	저출산 요인 인식	출산계획	평균	표준편차	t(p)
결혼과 자녀의 의미	없음	4.05	0.67	-.321	양육비 부담	없음	4.13	0.64	2.294*
	있음	4.08	0.65			있음	3.84	0.87	
부부의 역할 구분	없음	3.08	0.91	1.282	환경에 의한 불임 증가	없음	3.50	0.67	.468
	있음	2.90	0.92			있음	3.49	0.66	

주 1) Likert 5점 척도, 측정값이 높을수록 인식이 높음을 의미
 주 2) * : p<.05 ** : p<.01 *** : p<.001

<표 6> 미혼여성의 맞벌이 유무에 따른 출산·양육관련 요인변수 인식

개인가치관	맞벌이	평균	표준편차	t(p)	저출산 요인 인식	맞벌이	평균	표준편차	t(p)
결혼과 자녀의 의미	그렇다	4.06	0.66	.138	양육비 부담	그렇다	4.03	0.70	-.700
	아니다	4.05	0.68			아니다	4.10	0.73	
부부의 역할 구분	그렇다	2.91	0.89	-2.323*	환경에 의한 불임 증가	그렇다	3.48	0.67	-.230
	아니다	3.20	0.93			아니다	3.50	0.66	

주 1) Likert 5점 척도, 측정값이 높을수록 인식이 높음을 의미
 주 2) * : p<.05 ** : p<.01 *** : p<.001

그리고 저출산 요인 인식 중 양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은 맞벌이 하는 경우 4.03점·맞벌이 하지 않는 경우 4.10점이었으며, 환경에 의한 불임 증가에 대한 인식은 맞벌이 하는 경우 3.48점·맞벌이 하지 않는 경우 3.50점으로 맞벌이 유무에 따라서는 저출산 요인 인식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미혼여성의 출산·양육관련 요인변수의 인식

1) 결혼 후 출산 희망 자녀수에 따른 인식

미혼여성의 출산·양육관련 요인변수들을 결혼 후 출산 희망 자녀수에 따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미혼여성은 출산·양육에 대한 개인 가치관 중 <결혼과 자녀의 의미>가 결혼 후 출산 희망 자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결혼 후 출산 희망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4.24점, 2명인 경우 3.95점, 0-1명인 경우 3.53점), 출산·양육에 대한 부부의 역할구분과 저출산의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양육비 부담·환경에 의한 불임 증가)에 대한 인식은 미혼여성의 결혼 후 출산 희망 자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 미혼여성의 결혼 후 출산 희망자녀수에 따른 출산·양육관련 요인변수 인식

개인가치관	출산 희망자녀수	평균	표준편차	F(p)	저출산 요인 인식	출산 희망자녀수	평균	표준편차	F(p)
결혼과 자녀의 의미	0-1명	3.53 ^a	0.76	23.621***	양육비 부담	0-1명	4.10	0.62	2.596
	2명	3.95 ^b	0.58			2명	4.06	0.53	
	3명 이상	4.24 ^c	0.54			3명 이상	3.88	0.77	
부부의 역할 구분	0-1명	2.70	0.99	.427	환경에 의한 불임 증가	0-1명	3.47	0.74	1.360
	2명	2.58	0.92			2명	3.34	0.70	
	3명 이상	2.62	0.98			3명 이상	3.28	0.77	

주 1) Likert 5점 척도, 측정값이 높을수록 인식이 높음을 의미
 주 2) a, b, c : 사후검증의 동일집단군에 있는 집단
 주 3) * : p<.05 ** : p<.01 *** : p<.001
 주 4) 종속변수 : 결혼 후 출산 희망 자녀수

2) 결혼 후 출산 희망 자녀수의 영향요인

미혼여성의 결혼 후 출산 희망 자녀수에 출산·양육관련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표 8>과 같다.

미혼여성은 출산·양육에 대한 개인 가치관 중 <결혼과 자녀의 의미>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저출산의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중 <양육비 부담>과 <연령>이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미혼여성은 출산·양육에 대한 개인 가치관은 결혼과 자녀의 의미가 높을수록, 저출산의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은 양육비 부담이 낮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출산 희망 자녀수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혼여성의 결혼 후 출산 희망 자녀수 영향 요인 중에서 출산·양육에 대한 개인 가치관 중 <결혼과 자녀의 의미>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8> 미혼여성의 결혼 후 출산 희망자녀수 영향요인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p)
	B	표준 오차		
상수	2.073	.460		4.503***
결혼과 자녀의 의미	.538	.064	.438	8.421***
부부의 역할 구분	-.082	.045	-.095	-1.808
양육비 부담	-.197	.069	-.148	-2.876**
환경에 의한 불임 증가	-.075	.057	-.067	-1.323
연령	-.158	.044	-.181	-3.575***
학력(전문대졸 이하: 0)	.092	.093	.051	.987
종교유무(있음: 0)	.140	.081	.087	1.731

R² = .245, F(p) : 14.357***

주 1) * : p<.05 ** : p<.01 *** : p<.001

주 2) 종속변수 : 미혼여성 결혼 후 출산 희망 자녀수

<표 9>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적 지원 희망 사항

(평균±표준편차)

제도적 지원 희망 사항	기혼여성	미혼여성	전체	t(p)
다자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경감	4.21±.736	4.27±.667	4.25±.697	-1.010
다자녀 가정에 소득공제 확대	4.22±.761	4.27±.704	4.25±.728	-.896
저출산 관련 학교 및 사회교육 강화	3.90±.794	3.88±.797	3.89±.795	.320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지원	4.32±.678	4.40±.661	4.37±.669	-1.368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34±.656	4.47±.658	4.42±.660	-2.346*
산모도우미 서비스 강화	4.23±.685	3.99±.754	4.09±.734	3.674***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27±.663	4.22±.698	4.24±.684	.911
종일제 운영 유치원 확대	4.27±.721	4.27±.680	4.27±.697	.064
국공립보육시설확충 및 병설유치원 설립	4.29±.674	4.20±.689	4.24±.684	1.506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비 지원	3.90±.850	3.93±.793	3.92±.817	-.414

주) * : p<.05 ** : p<.01 *** : p<.001

5.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적 지원 희망 사항

연구대상 가임여성들의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희망사항을 파악한 결과 <표 9>와 같이, 희망 제1순위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4.42점)이었고, 희망 2순위는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4.37점), 희망 3순위는 종일제 운영 유치원 확대(4.27점)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적 희망사항을 결혼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기혼여성은 제도적 지원 희망 제1순위가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4.34점)이었고, 희망 제2순위는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4.32점), 희망 제3순위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병설유치원 설립(4.29점)이었다. 그리고 미혼여성은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희망 제1순위가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4.47점)이었고, 희망 제2순위는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4.40점), 희망 제3순위는 다자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다자녀 가정에 소득공제 확대·종일제 운영 유치원 확대(4.27점)이었다.

즉, 연구대상자들의 결혼유무와 관계없이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희망사항은 제1순위(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와 제2순위(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IV. 고찰 및 결론

2010년 우리나라의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은 1.22명으로 OECD에서 제시한 저출산 기준인 2.1명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OECD 주요국가들에 비해 최저 상황이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보이게 된 배경으로는 급속한 산업화 및 현대화로 여성들

의 가치관 변화와 이로 인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의 참여 증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국민인식조사를 비롯하여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여 제시 및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국민들의 출산과 관련된 실제 행동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출산 문제는 오늘날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출산장려를 위하여 저출산의 요인과 출산장려 정책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실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가임여성 544명을 대상으로 출산·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출산·양육과 관련된 개인가치관 중 결혼과 출산에 대해, 신효영[1]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들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녀관은 미혼보다는 기혼에서 더 높게 나타나 결혼 후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더욱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고, 방영이[12]는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에서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타 응답에 비해 많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도 연구대상 가임여성들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평균이상으로 높았는데,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저출산 요인에 대해서 신효영[1]은 기혼자들은 육아부담이 출산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이경숙 등[13]은 저출산에 대한 여대생의 인식 및 심리적 이해에 관한 연구에서 여대생은 사회적인 저출산 현상이 자녀 양육비용

부담감 때문이라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저출산 요인 인식으로 양육비 부담이 결혼유무에 관계없이 평균 이상으로 높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출산·양육과 관련되어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개인가치관과 저출산 요인으로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사항은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결과가 유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으로, 기혼여성들의 향후 출산 계획 유무에 따라 출산·양육관련 요인들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결과,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는 양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으나, 출산계획이 있는 경우 결혼과 자녀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혼여성들은 결혼과 자녀의 의미가 높을수록·양육비 부담이 낮을수록·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 후 출산 희망 자녀수가 높았으며, 결혼과 자녀의 의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연구대상 가임여성들은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희망사항 제1순위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었고, 2순위는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이었다.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유계숙[14]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2007년 자녀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결과, 단일 정책보다 여러 정책을 중복 수혜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으며, 신호영[1]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체감효과가 낮아 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방영이[12]는 대체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출산장려를 위한 방안의 모색은 스웨덴의 정책에 의한 안정적인 출산율 유지 모형과 독일의 정책시행에도 출산율이 감소경향인 모형을 모두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수혜자의 입장에서

에서 미혼여성을 포함한 향후 출산계획이 있는 가임여성들의 출산·양육과 관련된 제도적 희망이나 욕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한정하여 조사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대상의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신호영(2009),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6, 65-132.
2.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회, Vol.26(2);96-140.
3. 김경신(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Vol.36(10);145-159.
4. 통계청(2010), 인구동태연구, 2010년 출생잠정통계.
5. 강은주(2011), 울산광역시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8-59.
6. 최윤정(2010), 한국의 저출산 대응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7-10.
7. 이문옥(2006), 저출산을 대비한 출산 장려정책에 관련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3-71.
8. 위점애(2007), 우리나라 저출산 요인 분석 및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67-84.
9. 최문숙(2007), 저출산 정책과 해결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8-57.
10. 입법정책연구회(2006), 출산장려를 위한 입법방향, pp.37-94.
11. 나유미, 김미경(2010),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연구 동향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Vol.19(2);817-833.
12. 방영이(2010),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75-91.

13. 이경숙 정석진, 박진아, 신의진(2009), 저출산에 대한 여대생의 인식 및 심리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Vol.14(1);93-108.
14. 유계숙(2009), 저출산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2007년 출산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ol.14(1);180-181.

접수일자 2011년 5월 30일

심사일자 2011년 6월 11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6월 29일